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년 5월 15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597천 km ² 	인구 14억명 (2019 ^e)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 외교 
GDP 14조 1,402억 달러(2019 ^e) 	1인당GDP 10,099달러 	통화단위 元 (RMB) 	환율(U\$기준) 6.91 (2019 ^e)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14억 명의 인구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 정책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약 9.4%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함.
- 중국 정부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의식주 해결의 풍요로운 사회인 '샤오강(小康)사회'를 실현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안정 속 성장' 기조를 추진하면서 금융 리스크 예방, 환경 보호, 빈곤 퇴치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을 강화하는 질적 성장에 힘을 쏟고 있음.
-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무역분쟁 발생, 주변국과의 영토·영해 분쟁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 등 미국과의 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주요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4), 형사사법공조조약('00),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05), 투자증권보호협정('07), 사회보험협정('13), 기후변화협력협정('15), 영사협정('15), 자유무역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142,120,000	162,125,055	136,202,533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수입	97,860,114	106,488,592	107,228,736	산업용 전자제품, 철강제품, 섬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7,799건, 70,813백만 달러

중전 평가일 : 2019.04.09

분야		평가요소	2015	2016	2017	2018	2019 ^e
I. 국내경제 (50%)		1인당 GDP(달러)	8,150	8,188	8,893	9,993	10,284
		소비자물가상승률(%)	1.5	2.1	1.5	1.9	2.9
		재정수지/GDP(%)	-3.4	-3.8	-3.7	-4.1	-4.3
		GDP 규모 (억 달러)	111,135	112,269	122,653	138,418	142,990
		실질GDP 성장률(%)	6.9	6.7	6.8	6.6	6.1
		국내총투자/GDP(%)	43.0	42.7	43.2	44.0	42.8
II. 국제경제 (50%)	대외 거래 (25%)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17.6	16.3	15.0	12.9	13.6
		경상수지/GDP(%)	2.7	1.8	1.6	0.2	1.0
		총수출증가율(%)	-4.4	-6.2	12.1	6.7	-0.7
		총수출/GDP(%)	23.3	21.6	22.2	20.9	20.1
	외채 상환 능력 (25%)	총외채잔액/총수출(%)	53.5	58.4	64.7	67.8	72.5
		D.S.R.(%)	7.9	8.2	8.1	8.5	9.2
		총외채잔액/GDP(%)	12.5	12.6	14.3	14.2	14.6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27.7	28.9	35.0	39.4	38.9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e
경제성장률	6.9	6.7	6.8	6.6	6.1
소비자물가상승률	1.5	2.1	1.5	1.9	2.9
재정수지/GDP	-3.4	-3.8	-3.7	-4.1	-4.3

자료: EIU

대외환경 악화로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

-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주요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등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6.1%로 전년(6.6%) 대비 하락하였으나 정부 목표(6.0~6.5%) 달성에는 성공하였으며, 1인당 GDP는 10,284달러로 사상 첫 1만 달러를 돌파하였음. 산업별 GDP 구성은 1차 산업 7.1%, 2차산업 39.0%, 3차산업 53.9%으로 3차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3차산업 GDP 구성 비중: ('05)41.4%→('10)44.2%→('15)50.5%→('19)53.9%

-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지역별 봉쇄, 물류 제한, 조업 중단 등의 대응 규제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1분기 GDP는 성장률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처음으로 -6.0%의 역성장을 기록함(중국 국가통계국).
- 2분기 중 국내 경제활동이 회복되더라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연중 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제기구와 조사기관 등은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음(2020년 4월 이후 발표수치: ADB 2.3%, IMF 1.2%, IHS Markit 2.0% 등).

2019년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상승, 2020년에도 상승세 지속 전망

- 2018년 8월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결과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1%p 상승한 2.9%를 기록함. 돼지고기의 시장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료품의 생산·운반이 차질을 빚어 2020년에도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4.9% 상승하였으며,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18.3%에 달함.
- 다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서 유가 하락(4.15일자 WTI유 가격은 배럴당 19.87달러로 18년 2개월 만에 최저치)을 비롯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의 영향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을 다소 상쇄시킬 것으로 보임.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 단행 및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

- 교육·의료 등 민생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한편 2019년 4월부터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등 각종 감세를 단행한 결과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4.1%)보다 다소 악화된 -4.3%로 추정됨. 당초 2020년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19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감세로 재정적자 규모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e
경 상 수 지	304,164	202,203	195,117	25,499	141,335
경상수지/GDP	2.7	1.8	1.6	0.2	1.0
상 품 수 지	576,191	488,883	475,941	395,171	425,271
상 품 수 출	2,142,753	1,989,519	2,216,214	2,417,443	2,399,018
상 품 수 입	1,566,562	1,500,636	1,740,272	2,022,272	1,973,747
외 환 보 유 액	3,330,362	3,010,517	3,139,949	3,072,712	3,107,924
총 외 채	1,383,000	1,416,000	1,757,958	1,965,214	2,086,078
총외채잔액/GDP	12.5	12.6	14.3	14.2	14.6
D.S.R.	7.9	8.2	8.1	8.5	9.2

자료: IMF, EIU, OECD

미국과의 무역분쟁 영향으로 전체 무역규모는 소폭 감소했으나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

- 2019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영향으로 전년(4조 4,397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4조 3,72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 폭이 커서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증가한 1,413억 달러로 추정됨.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규모는 10.7% 감소한 반면 EU 및 ASEAN 국가와의 무역 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8%, 14.1% 증가하여 미국과의 무역 규모 감소분을 상당 부분 대체한 것으로 보임.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서 체결은 긍정적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무역규모 감소 전망

- 2020년 1월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서를 체결하여 향후 무역갈등 완화가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조건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산업활동과 소비가 모두 전례없이 침체되면서 2020년 무역규모는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함.
- 1단계 합의서에 의하면, 중국은 향후 2년 간 상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분야 380억 달러 등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은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기존의 1,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율을 7.5%로 인하하기로 함. 합의 내용에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등도 포함됨.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지급능력도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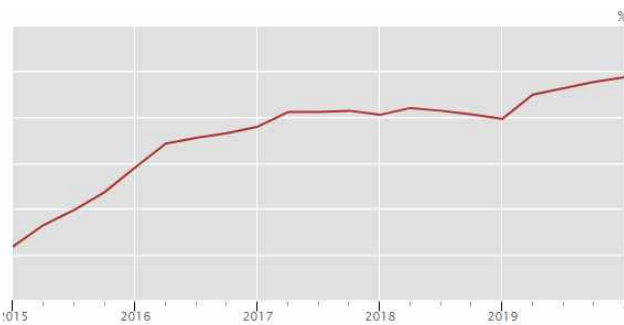
-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1,079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월평균수입액의 13.6개월분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5년간 꾸준히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GDP 대비 외채 비중이 2019년 기준 14.6%에 불과하고 2019년 9월말 기준 대외순자산은 2.16조 달러(대외금융채권 7.47조 달러, 대외채무 5.31조 달러)로 GDP의 15%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단, 2020년 3월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461억 달러 감소한 약 3조 6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임.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는 정점을 지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으로 향후 급격한 외환보유액 감소나 위안화 절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계속에 따른 추가적인 해외자본 이탈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구조적취약성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 지속으로 정부와 기업 부문의 부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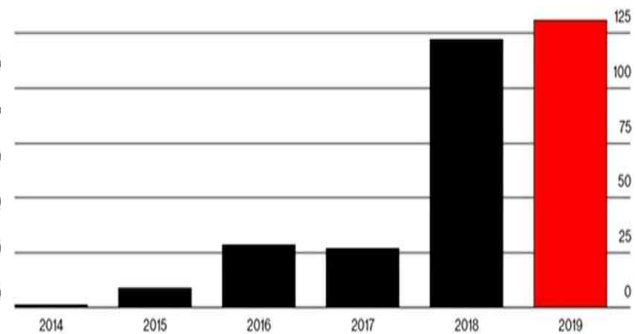
-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의 GDP 대비 부채(금융 부문 제외)비중은 2019년말 기준 259%로 전년말(250%) 대비 증가하였음. 차주별로는 정부부채 55%, 가계부채 55%, 기업부채 149%임. 이는 중국 정부가 수년 간 경제성장을 유지할 위해 다수의 지역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기업들의 투자 용도 차입이 확대된 결과임. 동 수치는 BIS가 발표하는 43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 전체 평균(222%)보다 높으며 일본(381%), 싱가포르(302%), 캐나다(301%), 유로존(평균 262%)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2019년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발생은 177건, 1,419억 위안으로 2018년(125건, 1,210억 위안)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음.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 문제의 개선을 위해 국유기업을 포함하여 부실기업의 디폴트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8년부터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하였으며, 2019년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완만한 수준임.
- 2019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인민은행 등은 '기업 레버리지 비율 축소 업무요점'을 발표하여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의 채무를 조속히 청산·처분할 것을 명시하였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2020년에도 회사채 디폴트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GDP 대비 부채 비중(%)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십억 위안)



자료: Bloomberg

2019년 위안화 환율은 전년 대비 상승

- 2019년 미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전년도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 평균 6.91위안을 기록하여 전년(6.62위안) 대비 상승하였음. 8월 초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직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해 환율 조작은 전혀 없다며 미국의 작위적인 지정이라고 비판하였음.
-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서 9월 이후 위안화 환율은 최고점 대비 다소 하락하였고(9.3일 7.18 → 12.31일 7.00), 2020년 1월 미국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대부분의 통화들과 마찬가지로 위안화 환율도 전년에 이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성장잠재력

노동자의 숙련도와 노동시장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취약

-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보고서에서 중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종합 순위 28위를 기록하였으나, 부문별로는 노동자 숙련도 부문에서 64위, 노동시장(유연성 및 동기부여) 부문에서 72위에 그쳐 노동력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전방위적 개방정책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질적 성장 도모

- 중국 정부는 2018년 6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범위를 축소(63개 → 48개)한 데 이어 2019년 7월에도 40개로 리스트를 축소하여 농업,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제한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며 FDI 유치를 지속 도모하고 있음. 중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9년 기준 약 1,400억 달러로 세계 2위, 전 세계 FDI의 10.1% 규모임(UNCTAD).

*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외에는 전면 개방한다는 의미로 2017년 6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음.

정책성과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노력

- 2019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은 기존의 외자3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이 법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을 규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가속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전년도에 이어 세계 비즈니스 환경 순위 큰 폭으로 상승

- 2019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년도에 32계단 순위가 상승한 데 이어 또다시 15계단 순위가 상승하여 전 세계 31위를 차지하였으며, 2년 연속으로 '세계 비즈니스 환경 개선폭이 가장 큰 10개국'에도 이름을 올렸음.
-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개혁조치로 10개 평가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하였음.

* 창업, 건축 인·허가, 전력공급, 재산권 등록, 소액투자자 보호, 납세, 통관, 계약이행, 파산처리

정책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중국 정부는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모두가 넉넉하게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도모해 왔음.
- 2018년 10월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대질환 치료 등 6개 특별공제항목을 포함한 신규 개인소득세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조업 분야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3%로, 교통·건설업 분야는 현행 10%에서 9%로 각각 인하하는 등 큰 폭의 감세를 시행하였음.
- 중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3월 27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적절히 확대하고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하며,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힘. 하반기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 : 신규 지방채 한도 조기승인 등 지방정부 재정 지원, 기업의 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감면,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화물입항료와 항만시설 보안료 인하, 수출세 환급률 인상 등
- 통화정책 : 역환매조건부채권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2~3월 중 1조 2,700억 위안) 및 금리인하(2~3월 중 총 30bp), 농촌거점은행 지급준비율 인하(4~5월 중 총 100bp), 금융기관 초과지급준비금 금리 인하(27bp), 대출우대금리(LPR) 인하(2~4월 중 1년 만기 총 30bp, 5년 만기 총 15bp) 등

정치동향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체제 공고화

- 2018년 3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공산당 중심의 통일된 집권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함.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관계 갈등과 성장잠재력 둔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불안과 경제위기가 권력 집중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대응 미숙과 정보 비공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으나, 강력한 방역 및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가 뒤늦게 퍼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시기에 상황이 안정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적 모습이 강조되고 있음.

사회동향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와 강경 진압 계속

- 2019년 3월 말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며 촉발된 시위가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적으로 확대, 연중 지속되었음. 홍콩 정부가 이를 강경 진압하고 소요가 심화되면서 인권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홍콩의 기업여건과 정치적 안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평판이 악화됨.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시위는 잦아들었으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4월 18일 홍콩 경찰이 주요 민주화 인사 15명을 대거 체포함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신장 자치구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 통제 강화

-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 내 테러, 분리주의, 종교 극단주의 근절을 명목으로 2017년 '신장 자치구 반극단주의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 중임.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이 수용소에 약 100만 명의 무슬림 소수 민족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미국은 2019년 12월 하원에서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을 가결하였으며, 2020년 3월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2019'에서 전년도에 이어 신장 수용소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는 등 신장 자치구 문제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

정부의 강력한 언론통제 심화

- 중국은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 항목 중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 141개국 중 140위,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언론자유지수'에서는 180개국 중 177위에 해당할 정도로 자유로운 언론 보도가 제한되고 정부에 의한 강력한 언론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인터넷 뉴스 정보를 관리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이 규정은 제작·배포를 엄금하는 11가지 악성 콘텐츠*를 명시함. 정부는 뉴스 공급자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에 대한 부당한 논평과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억제해야 하며, 사용자들의 유언비어 날조 행위에는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을 가하겠다고 밝힘.

* 헌법 위배, 국가안보 훼손, 국가 정권 전복, 국가통일 파괴, 국가 이익 훼손, 영웅 열사 정신 왜곡,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선동, 민족단결 파괴, 국가 종교정책 위반, 유언비어 유포와 경제 및 사회질서 교란, 음란·외설·도박·살해 등의 범죄 유포, 명예 훼손, 법률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을 포함한 정보 등

국제관계

1단계 무역합의서 서명으로 미국과의 무역갈등 해소가 기대되나 분쟁 국면 전환 가능성 상존

- 2020년 1월 15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서에 서명하여, 2018년 3월 이후 22개월에 걸쳐 지속된 무역분쟁의 합의사항을 공식화함.
- 동 합의를 통해 양국의 무역갈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2단계 합의 과정에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 보다 민감한 이슈가 남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국의 1단계 합의사항 이행 가능성이 의문시되어 다시 분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함.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속,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도 갈등 발생

-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 각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의 범위가 중첩되고 (중국은 일명 '구단선'을 앞세워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 남중국해에 매장된 원유·가스의 발굴 등 경제적 이익이 관련되어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기지화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며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주기적으로 해당 해역에 자국 군함을 진입시키고, 중국은 이를 주권침해 행위로 비난하며 군사력을 동원한 대응에 나서는 등 단순한 영해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권 및 패권 다툼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압박 계속

- 중국은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에 대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음.
- 그러나 대만에서는 홍콩 시위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강화되어 2020년 1월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주권 수호를 내세운 차이잉원 총통이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의 독립행위를 불허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하여 외교적,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임.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제관계 외연 확대 노력

-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하여 2049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과 참여국들 간에 육·해상을 아우르는 新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 정치·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장기 국책사업임.
-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배타적인 에너지 운송권 확보와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참여국들은 중국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국들이 중국에 대해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되고 중국 기업들에 각종 사업 이권을 넘기면서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등 일대일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2020년 3월 기준 138개 국가가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중 38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개국이 유럽 및 중앙아시아(EU 회원국 18개국 포함), 25개국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이 중동·북아프리카, 18개국이 중남미, 6개국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음.

외채상환태도

풍부한 외환보유액 유지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중국은 단기외채잔액(2018년 말 1조 990억 달러, OECD)의 2.8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2019년 말 3조 1,079억 달러)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9.2%의 낮은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편임.
- 한편, 2019년말 기준 중국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채무 잔액은 단기 116억 달러, 중장기 130억 달러 등 총 246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은 중장기 33백만 달러(0.13%)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2등급(2019.06)	2등급(2018.06)
Moody's	A1 (2017.05)	Aa3 (2016.03)
Fitch	A+ (2018.12)	A+ (2017.08)

최근 국제신인도는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

- 2017년 Moody's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채 증가세 지속 등을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A1 및 A+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OECD 및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은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2019년 6.1%의 성장을 시현하여 1991년 이후 최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정부 목표치인 6.0~6.5%에는 부합하였음.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2배 성장시키고 2021년 의식주 해결의 풍요로운 사회(샤오캉 사회)에 진입한다는 정책목표를 추진해왔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소비 및 생산활동 위축과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로 올해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공산당 1당 독재체제로 정치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언론 통제,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불안을 계기로 권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한편, 2019년 6월부터 홍콩에서 시위 및 소요사태가 격화된 이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패권 다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가 상존하나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19년 14.6%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9.2%로 낮은 수준임.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호한 국제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음.